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5년 11월 19일(목) 조간
담당자	김지섭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044-550-4212, jiseob.kim@kdi.re.kr)
배포일시	2015년 11월 18일(수) 09:00
배포부서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김지섭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

본고는 2015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

연구위원 김지섭

1. 문제의 제기

■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중고령층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고 있어 향후 가계부채 문제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나타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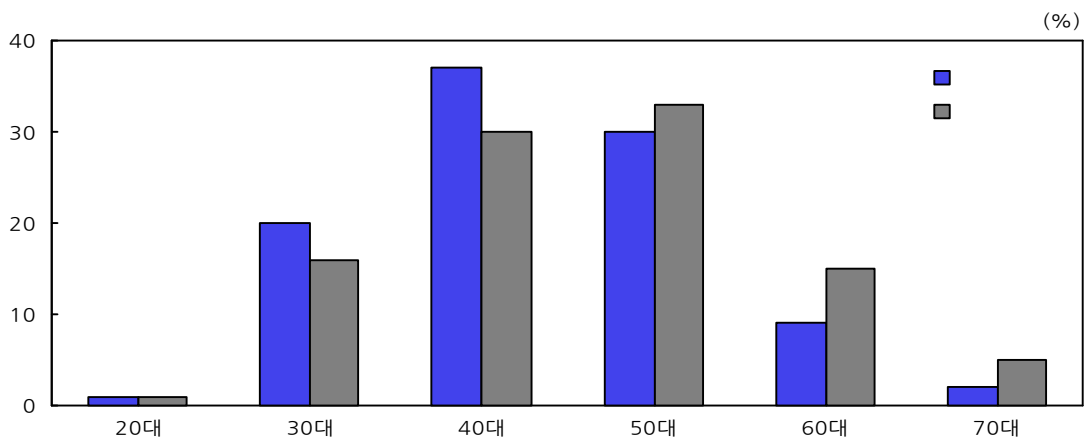
● 가구주 연령별 가계부채 분포의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추적해 본 결과, 우리나라 고령가구의 부채비중은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4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 현안분석, 「가계부채의 연령별 구성변화: 미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참조).

- 가계부채는 총량 기준으로 GDP 대비 81%(2014년)까지 상승하였으며, 이 가운데 50대 이상의 중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1%에서 2014년 53%까지 확대됨.

* 본고는 가구단위 분석을 기반으로 하므로 고령층이라 함은 고령가구주 가구를 의미함.

●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현재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령층의 가계부채 상환여력 및 취약성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

가계부채의 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변화



자료: 2004년 「노동패널」;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본고는 우리나라 고령층 가계부채의 상환여력을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평가하고, 가계 부채의 동태적 변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항에서는 한국, 미국, 유럽의 가구단위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층의 가계부채 상환 여력을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비교·평가(Box 1 참조)
 - 우리나라 가계부채 현황을 유럽 국가들과 비교·분석한 자료는 부재하므로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에서 발간한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HFCS)에 대한 소개를 부록에 수록
- 아울러, 3.항에서는 우리나라의 거시금융여건, 생애주기별 가계부채 상환 패턴 등 가구 외적인 요인이 고령층 가계부채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적 관점에서 분석

Box 1: 분석에 활용한 미시자료 소개

- 본고에서는 총 5종류의 한국, 미국, 유럽 가구단위별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국가별 가계부채의 상환여력을 비교·분석함.
 - 각각의 미시자료는 설문시기, 설문주기, 패널 여부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 분석 시점 및 내용에 따라 상이한 미시자료를 혼합하여 사용

		설문연도	설문주기	패널	발행기관
한국	노동패널	1998~2012년	1년	0	노동연구원
	가계자산조사	2006년	단년도	X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0~14년	1년	2010~2011년, 2012~2014년	통계청
미국	SCF	1983~2013년	3년	1983~1989년, 2007~2009년	미 연준(FRB)
유럽	HFCS	2010년 전후	단년도	X	유럽중앙은행 (ECB)

2. 고령층 부채 상환여력에 대한 평가

가. 소득 대비 가계부채 현황

■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상환부담은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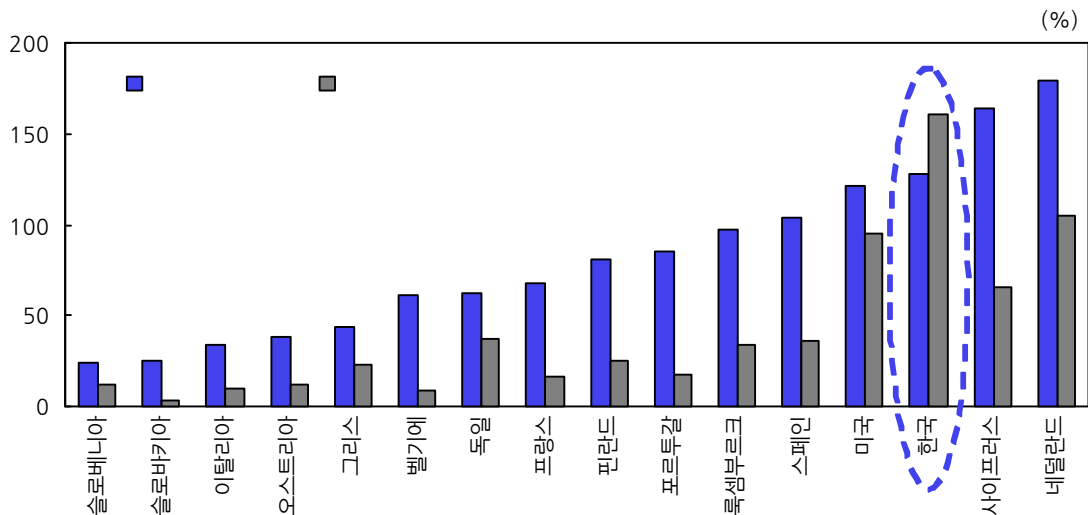
● 우리나라 전 연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전연령층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연령대의 평균보다 크게 낮음.

- 반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로써 전 연령대 평균(128%)을 상당 폭 상회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비교 가능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이러한 현상은, 주요국의 경우 생애주기에 걸쳐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온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조정이 지연된 데 기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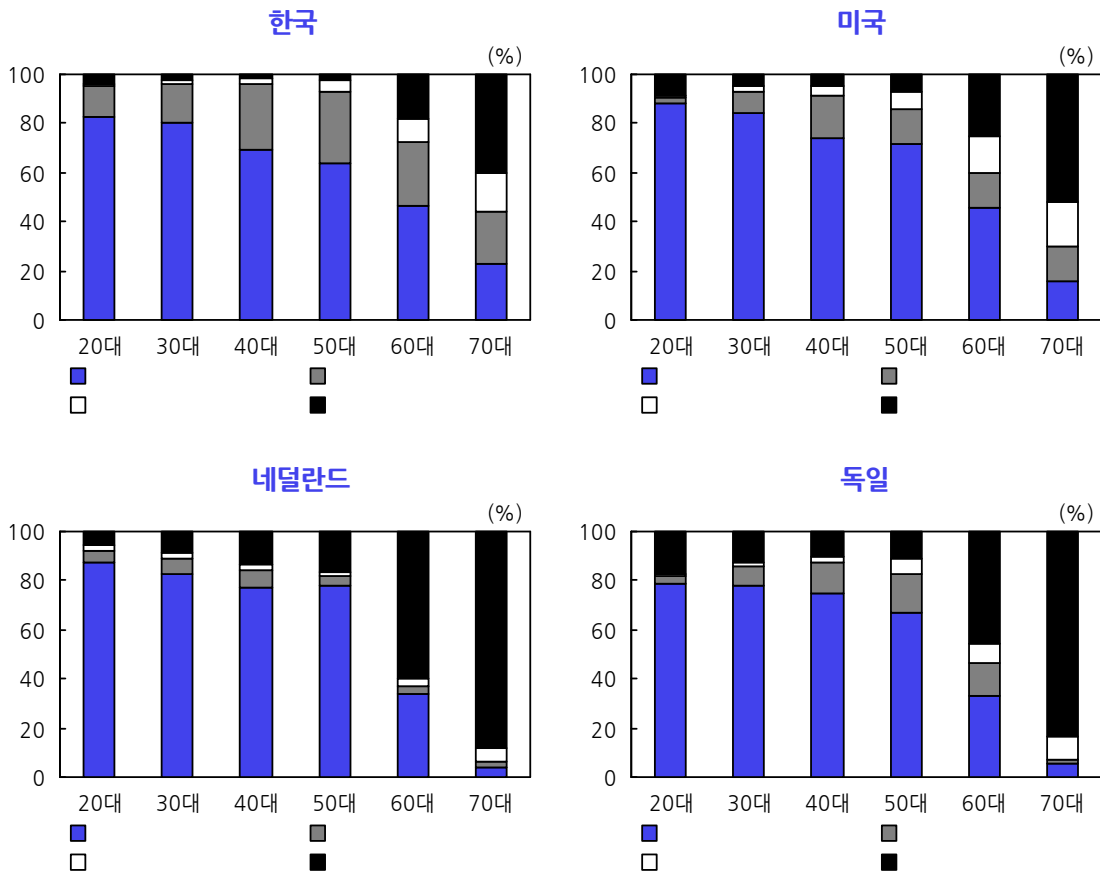
주: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본고는 경상소득을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함.
 자료: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HFCS; 2013년 SCF.

나. 소득 안정성

■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고령층의 부채 상환여력은 주요국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 가구의 소득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연금 및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정도에 불과하여, 이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독일 및 네덜란드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
 - 미국의 고령층 소득 중 연금소득 비중(39%)이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법정 은퇴연령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음.
- 반면,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변동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 가구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의 비중은 여전히 50%를 상회하고 있음.

가구주 연령별 가계소득 구성



자료: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HFCS; 2013년 SCF.

다. 자산 유동성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령층의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부채 조정 요구 등과 같은 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

-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67%)은 주요국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나,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74%)은 미국·유럽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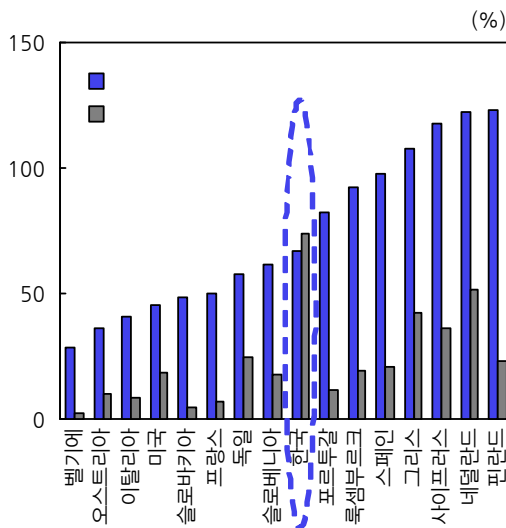
- 우리나라 고령층의 전체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타 국가들과 비슷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는 고령층의 부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됨.

* 60대 이상 고령층의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중(%): (한국) 18, (미국) 47, (독일) 23, (전체 평균)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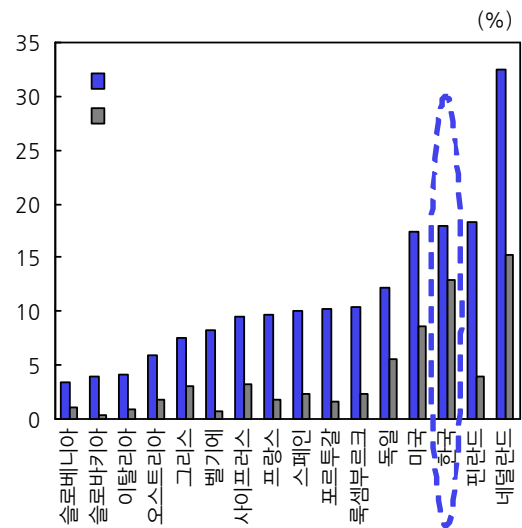
- 따라서 거시경제여건의 변화로 급격하게 부채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가구의 상환능력이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

- 다만, 총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 내외에 머물러 있어, 자산 가격이 급락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고령층 전반의 상환능력 자체를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사료됨.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총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료: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HFCS; 2013년 SCF.

3. 고령층 가계부채의 동태적 변화 요인 분석

■ 한편, 고령층의 가계부채는 가구 내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여건, 연령대별 가계부채 상환패턴, 대출구조 등 가구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동태적 분석이 필요

- 예컨대, 생애주기 관점에서 부채 순상환(상환>차입)이 시작되는 연령대,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대출제도(원리금분할상환 혹은 원금일시상환 등)에 따라 고령층의 가계부채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이러한 동태적 변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대별로 평균 가계부채의 증감을 동세대 효과(cohort effect)와 연령 효과(age effect)로 분해(Box 2 참조)

- 동세대 효과는 경기변동, 금리, 대출제도(예: LTV, DTI) 등 거시금융환경 변화로 현재의 특정 연령대가 과거의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증가(축소)시킨 대출규모를 의미
- 연령 효과는 시점에 관계없이 특정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부채를 차입 혹은 상환하는 규모를 의미

Box 2: 가계부채 증감의 연령 효과 및 동세대 효과 분해

- t 시점에 가구주 연령 a 가 보유한 평균 가계부채의 양을 $d_{a,t}$ 로 정의
- 이 경우, Δ 의 기간이 경과한 $t + \Delta$ 시점에 가구주 연령 $a + \Delta$ 가 보유한 평균 가계부채의 양은 $d_{a+\Delta,t+\Delta}$ 로 표시될 수 있음.
- 이 기간 동안 발생한 가계부채의 증감은 다음과 같이 분해 가능

$$d_{a+\Delta,t+\Delta} - d_{a,t} = \underbrace{[\alpha(d_{a+\Delta,t+\Delta} - d_{a,t+\Delta}) + (1-\alpha)(d_{a+\Delta,t} - d_{a,t})]}_{\text{연령 효과}} + \underbrace{[\alpha(d_{a,t+\Delta} - d_{a,t}) + (1-\alpha)(d_{a+\Delta,t+\Delta} - d_{a+\Delta,t})]}_{\text{동세대 효과}}$$

- α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가중치로써 본 분석에서는 α 을 0.5로 설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분석은 2006~14년 기간 중의 부채 증감을 연령대별로 분해한 후 소득 대비로 정규화하였음.

■ 분석 결과, 최근 우리나라의 거시금융여건(동세대 효과)은 전 연령대에서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우리나라 가계는 상대적으로 낮은 50대에 이르러서야 부채를 축소시키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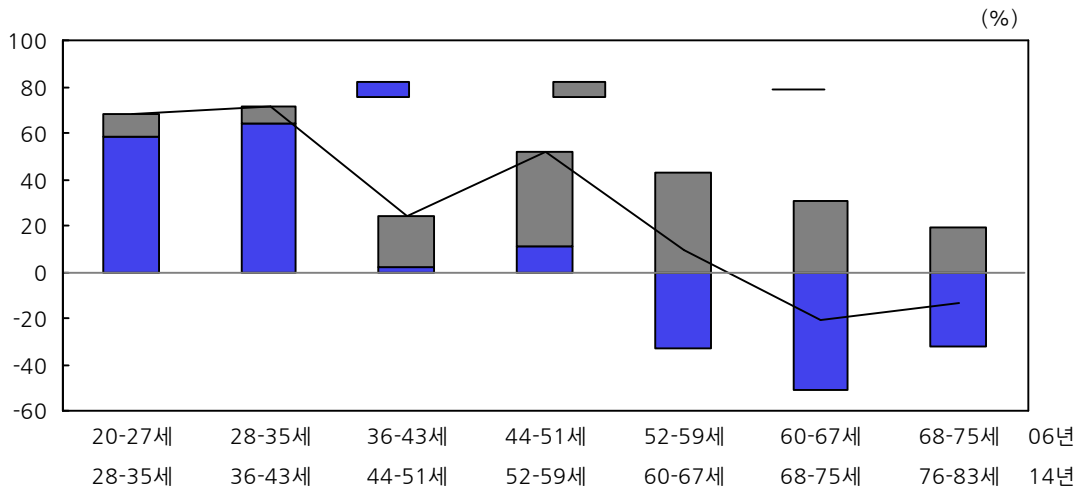
● (동세대 효과) 전 연령대에서 동세대 효과가 양의 값(그림의 회색음영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음은 분석대상 기간인 2006~14년 동안 우리나라의 거시금융여건이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음을 시사

- 예컨대, 2006년에 60~67세였던 연령대와 비교하여 2014년의 60~67세 가구는 소득 대비 38% 정도의 부채를 더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환여력이 과거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60세 이상의 동세대 효과는 40대 미만의 연령대보다도 크게 나타나, 이 기간 중의 거시금융환경은 고령층 가구의 재무건전성을 더욱 악화시켰던 것으로 나타남.

● (연령 효과) 우리나라 가계는 미국(40대 중반)에 비해 약 7~9년 정도 낮은 50대에 이르러서야 부채를 축소시키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파란색 음영), 고령층이 될 때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부채부담을 지게 되는 것으로 평가

- 이러한 부채상환의 지연은 40대 가구의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에 따른 낮은 저축 성향에 기인할 가능성(2014년 상반기 『KDI 경제전망』 현안분석,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참조)

우리나라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대비 가계부채 증감 분해



주: 가로축은 2006년 당시 가구주 연령이 a 인 그룹이 2014년에 $a + 8$ 이 되는 것을 의미함. 연령별 평균 (실질) 가계부채 증감을 2006년과 2014년 전 연령 평균 (실질) 소득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정규화함.

자료: 2006년 「가계자산조사」;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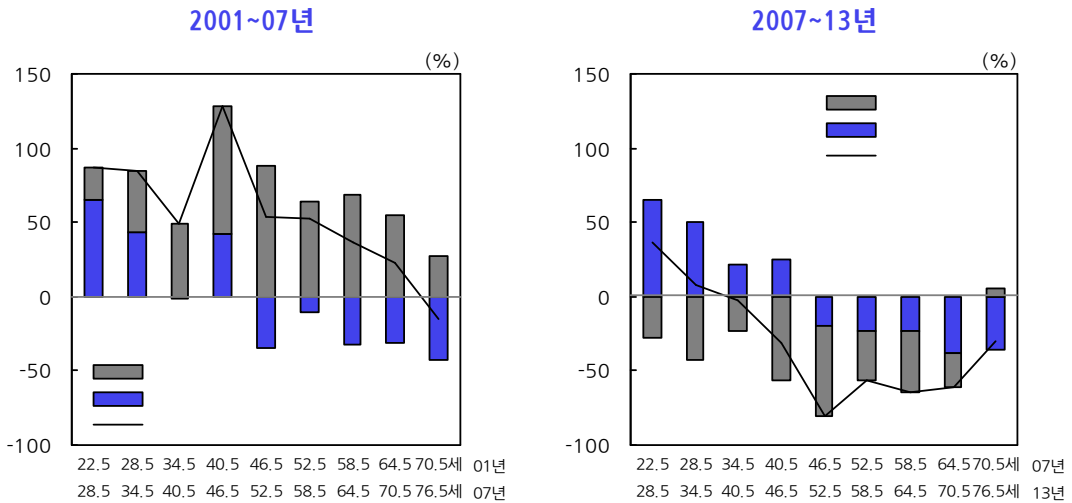
■ 한편, 연령 효과에 비해 변동성이 높은 동세대 효과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급변할 경우(즉, 거시금융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소득 안정성 및 자산 유동성이 취약한 고령층의 부채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

●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동세대 효과가 전 연령층에서 양의 값(부채가 증가)을 나타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급격히 반대 방향으로 전환된 경험이 있음.

-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해서도 대출이 관대하게 이루어지면서 전 연령대에 걸쳐 부채가 증가한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용경색 등에 의해 거시금융여건이 부채를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급격히 반전

- 그러나 이때에도 연령 효과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령 효과에 비해 동세대 효과는 매우 가변적일 수 있음을 시사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미국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부채 증감 분해



주: 가로축은 t 년에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a 인 그룹이 $t+6$ 년에 $a+6$ 이 되는 것을 의미함. 연령별 평균 (실질) 가계부채 증감을 t 년과 $t+6$ 년의 전 연령 평균 (실질) 소득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정규화함.

자료: 2001, 2007, 2013년 SCF.

●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부채를 축소시켜야 하는 거시금융여건 변화(동세대 효과의 반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고령층에서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

- 미국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부채규모에 비해 소득 안정성 및 자산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이 그동안 동세대 효과에 의해 부채를 증가시켜 왔다는 점은 거시금융여건 변화에 고령층이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

-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거치식·일시상환 방식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 차환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상존하는 가운데, 소득흐름이 급격히 낮아지는 고령층은 차환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가능성
 -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계약기간은 약 24.5년(중앙값은 30년)¹⁾이고, 유럽의 경우에도 대부분 20~30년²⁾인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야 17~18년³⁾으로 증가하고 있음.
 - 아울러, 유럽 주택담보대출에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은 평균적으로 7.5%⁴⁾이고 미국에서도 7%⁵⁾ 내외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29%⁶⁾에 육박
 - 즉, 우리나라 가구의 상당수는 계약기간 중 이자만 상환하다가 계약 만료 시 기존 대출의 원금을 신규대출로 차환하는 방식으로 부채를 이연하면서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따라서 거시금융여건이 변화하여 차환이 어려워질 경우, 소득 안정성이 낮고 대출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고령층에서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1) 2013년 SCF에서 계산한 수치임.

2) European Central Bank, "Housing Finance in the Euro Area," No. 101, 2009.

3) 기획재정부, 「2015년 경제전망」.

4) European Central Bank, "Housing Finance in the Euro Area," No. 101, 2009.

5) Andra C. Ghent and Marianna Kudlyak, "Recourse and Residential Mortgage Default: Evidence from US States,"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24(9), 2011, 3139-3186.

6) 기획재정부, 「2015년 경제전망」.

4. 요약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고령층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주요국 대비 부채 상환여력이 취약한 반면, 부채규모는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고령층은 안정적인 소득원인 연금소득 비중이 낮은 가운데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높아 단기적인 부채 상환여력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
- 반면, 최근의 거시금융여건이 고령층을 포함한 전 연령층의 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부채상환은 50대 이후에야 시작됨에 따라 고령층의 부채 감축이 지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거시금융여건이 변할 경우 소득 안정성 및 자산 유동성이 취약한 고령층의 부채 상환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신속히 정착시켜 부채 부담이 고령가구까지 이연될 가능성을 축소하는 한편, 부동산 유동화 방안을 확충하여 고령가구의 자산 유동성을 제고할 필요

- 가계부채 상환구조를 거치식·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유지되는 은퇴 이전 시점까지 부채 원리금의 상당 부분을 상환하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 소득이 상대적으로 작은 젊은 층에 대해서는 가계대출을 장기화함으로써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부담을 낮추고, 현재의 소득은 높지만 향후 소득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DTI 산정 시 은퇴 이후 소득 및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필요
- 이와 함께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 등을 적극 확대하여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고령가구의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상환을 유도

■ 부 록 ■ 유럽의 가계부채 미시자료 소개

■ 유럽 국가들의 가계금융 현황을 파악하는 데 활용한 Household Finance and Consumption Survey(HFCS)에는 가구·개인 단위별 소득, 자산, 부채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

● 15개국 중앙은행 혹은 통계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유럽중앙은행에서 최종 취합 및 발표

-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몰타,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가 참여하고 있으나 전 유로국가로 설문지역을 확대할 예정

- 몰타의 경우, 가구주 연령자료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함.

● 표본 가구 수는 국가별로 상이하고, 설문조사는 2010년 전후에 실시

- 향후 매 2~3년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

- 2013년 4월에 초기 자료가 발간되었으나, 2015년 2월 기 발표된 자료의 일부 오류를 수정하여 재발간

HFCS 설문 가구 수 및 설문시점

국가명	가구 수	설문시점	국가명	가구 수	설문시점
오스트리아	2,380	2010. 1/4~2011. 4/4	이탈리아	7,951	2011
벨기에	2,327	2010	룩셈부르크	950	2010. 3/4~2011. 2/4
사이프러스	1,237	2010~11	몰타	843	2010. 1/4~2011. 4/4
독일	3,565	2010. 3/4~2011. 3/4	네덜란드	1,301	2010
스페인	6,197	2008. 4/4~2009. 3/4	포르투갈	4,404	2010
핀란드	10,989	2009~10	슬로베니아	343	2010. 4/4
프랑스	15,006	2009	슬로바키아	2,057	2010. 3/4~4/4
그리스	2,971	2009. 2/4~3/4			